

여야, 7월 국회 강대강 대치... '청문 정국' 2라운드

14일부터 장관 후보 인사청문 민주 '능력중시'·국힘 '송곳검증' 방송3·노란봉투·검찰개혁 충돌 興, 민생·개혁입법 속도전 전망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부터 시작되면서 7월 입시국회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여야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창과 방패'의 결전을 예고하면서 청문 정국 2라운드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내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 등에서 벌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베풀고 있다.

소관 상임위별로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청문 정국의 목표로 잡았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고 개혁·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초대 내각 구성에 재산과 경력 등 검증 과정을 거친 현역 의원 후보자가 다수 포진했다는 점도 낙마 없는 청문회의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1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안규백(국방), 윤호중(행정안전), 정동영(통일), 정성호(법무),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수산), 강선우(여

성가족) 등 후보자 7명이 민주당 현직 의원이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을 여당·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을 베풀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여론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조현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리는 7월 입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법안 13건과 여야의 민생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신속하게 재추진한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꼽힌다.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이달 입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낸다.

방송 3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로, 이후 이른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도 논의에 속도를 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올해 가을 추수 시기에 맞춰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

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에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양곡법과 농업법, 필수농자재법은 수확기 전인 8-9월에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사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공소청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내에서는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처리 등에서 거대 여당의 수적 우위에 번번이 밀렸기 때문에 원내 전략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6일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남도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청래, 광주서 '국민이 지키는 나라' 복콘서트 '국민이 지키는 나라' 복콘서트가 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과 참가자들이 만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 "인공태양 나주 유치"... 전방위 설득전

박찬대 "전향적·적극적 검토할 것"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6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을 방문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공모 절차 없이 나주로 정책지정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김 지사와 박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주의 에너지산업 생태계와 국가산단 조성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 절차 없는 정책지정 △광양·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120만 평)

조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관련해 "나주는 세계적인 에너지 인프라와 핵심기술, 주민 수용성까지 갖춘 최적지"라며 △한전과 에너지공과대를 중심으로 한 300여 전력기자재 기업 집적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등 핵융합 기술 기반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새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서명했고, 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현장을 방문하게 된 만큼 전남도의 건의 내용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출국... "한미 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특히 위 실장의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현지에서 위 실장은 관세율 조건 혹은 유예기간 연장 등을 두고 집중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

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고 언급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지에서 만날 미국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실장은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연합뉴스

당정 "추경 집행관리예산 85%, 9월말까지 집행"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 "폭염 피해 최소화 적극 대응"

당정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집행해 9월 말까지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박 대변인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또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지속 소통·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선, 기후변화로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풍수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과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유형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빗물받이,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에 촘촘하게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온열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지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뿌리기를 확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